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정면 충돌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민주당 "총선개입" 국힘 "지라시"

김오수 총장 불출석 놓고 입씨름

여야는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과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

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제기는 처음"이라며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 정확하다. 이게 정치공세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현안질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추미에 장관의 병역특혜 의혹에는 현안 질의의 요구에 열려 있던 회의도 무산시키더니, 지라시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정치인 장관을 불러놓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사주, 공작, 정부 이런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니냐"며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선택적

현안질의냐"고 말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이 이어졌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 관련해 출석한 선례가 없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현안질의를 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와야 한다"며 "안 그러면 누가 이 지라시 같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소상히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라는 말에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현안질의를 진행해 보고 충분치 않다면 다음에 검찰총장을 부르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역선택' 절충안 수용

경선 룰 내분 수습...신경전 계속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경선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충안을 수용해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룰을 둘러싼 신경전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위원회의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까지 전달 받는데 확정된 경선룰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당장의 1차 '룰 전쟁'은 막을 내린 양상이다.

당 선거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 투

표에 당일 투표 20%를 넣기로 했다. 또한 2차 컷오프를 거쳐 실시되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 조사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룰 결정을 위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홍 의원 측의 말대로 본선의 소지가 될 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토론이다. 당은 7일 대선 후보 프레젠테이션(PT)에 이어 9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의 후보 대상 공개 면접을 거쳐 1차 생존자 8명을 남긴다. 7일 PT에서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추첨을 통해 질문할 대상

을 뽑는 등의 형식을 취하는 만큼 전통적 방식의 토론 회라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자평하는 홍 의원이나 유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명의 후보를 놓고 기존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차 경선이 끝나면 토론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구를 두고도 후보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점을 고려하면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단계에서 '디테일'을 놓고 갈등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언론법 협의체' 외부 위원에 김필성·송현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들로,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외신기사를 상대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 체계에 언론·출판으로 인한 명예훼손 대응 근거가 있어 언론중재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며 "일선 기자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도 그간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해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외부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언론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부위원 추천을 마치는 대로 규명협 협의체를 바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 현장 방역 위반 땐 지자체서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리피링에서 관련 질의에 "각 당의 후보 경선 자체는 정당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활동으로,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다만 "경선 자체가 큰 행사다 보니 당

국에서도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수천 명의 관중이 있는 가운데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경선 과정을 운영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충청권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한 데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부친 땅 청문 절차 진행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에 대해 행정 당국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6일 "개인정보 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은 행정 처분 등을 하기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농

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사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

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국민 주4일 근무제'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대선 첫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안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로 압축되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으로는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제안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건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 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더 나아가 일할 마나는 일자리, 여가기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지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방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